

---

# 2022 선원정책 시행계획

---

2022. 1.



해양수산부



## 목 차



I. 시행계획의 성격과 수립경위 .....	1
II. 2021 선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.....	2
III. 최근 선원 상황 진단 .....	7
IV. 2022 선원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 .....	11
V. 추진과제 .....	14
1.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.....	14
2.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.....	22
3. 해기인력 역량 강화 .....	43
VI. 추진일정 .....	48

# I. 시행계획의 성격과 수립 경위

## □ 계획의 성격

- 선원정책의 중·장기 전략인 「선원정책기본계획(2019~2023)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 계획

## □ 법적 근거

- 선원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

### 관련 법령

제107조(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선원정책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
## □ 선원정책 시행계획 수립 경위

- '19. 1 : 「선원정책기본계획(2019~2023)」 수립·고시
- '19. 12 : 2020년도 선원정책 시행계획 수립
- '20. 12 : 2021년도 선원정책 시행계획 수립

## Ⅱ. 2021년 선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

### 1.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

#### ① 일자리창출을 위한 맞춤형 해기사 양성

- 노·사·정의 국적해기사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의사 재확인 및 임금 직접지원에 대한 기재부 협의 완료('21.12)
- 해양대, 해사고, 오션폴리텍, 수산분야 지정교육기관 등을 통해 1,964여명의 신규 인력 양성
  - \* ('21년 졸업생) 해양대 909명, 해사고 268명, 수산계열 약 700명
  - \*\* 오션폴리텍 외항상선(3급) 37명 수료('21. 2~12) / 내항상선(5급) 20명 수료('21. 5~10)
- 국적부원(15명) 해기면허 취득교육 지원을 통한 경력직 해기사 양성

#### ② 국적부원 양성 추진

- 국적부원 고용확대를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(4회),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신규 국적부원 양성(230명 양성, 143명 취업, 17명 취업 예정)

#### ③ 선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및 선원교대 지원

- 3월부터 일반국민보다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, 접종대상 확대, 8월부터 사전예약 없이 현장접수 후 접종토록 제도마련 등 시행
- 방역지침을 개정하여 교대선원 국내입국 허용('21.8) 및 PCR 유효기간을 승선일 기준으로 변경('21.7) 등 원활한 선원교대 지원

#### ④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

-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협력을 위한 한-인니 MOU 체결(5.31), 송출입 공공화 등 MOU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(10.1)
-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공공화를 위한 수협의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(11월)

## 5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

- 노사정이 함께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를 조사하고(5월, 12월), 외국인 선원 고충상담을 위한 콜센터 운영(수협, 선원복지고용센터)
-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('20.12)에 따라 원양 선사의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노사정이 합동 점검(2월, 4월, 8월, 12월)
-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TF를 구성,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 임금을 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합의(12월)

## 6 선원 구인·구직시스템 활성화

- 선원정신건강증진사업 시스템을 구축('21.7월) 하여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과 상담 통계 데이터 신뢰성 확보
- 미허가 선원소개소 점검(전국 권역별 주요항만 조사)을 통한 선원 취업 희망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취업 질서 확립

### ◆ 보완 필요사항

- '21년도 국적해기사 일자리사업 미이행으로 발생한 이월예산 활용방안 수립 필요

## 2.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

### 1 선원 근로감독 역량 강화

- 선원근로감독 및 인권침해, 인신매매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직무교육 실시(4월, 10월)

### 2 어선원 관련 국제협약 대응

- 어선원 노동협약(c.188) 비준 관련 노사정 협의(3회) 및 지역별 간담회(5회) 개최를 통한 현장 수용성 확보(~'21.12)

### ③ 선원들의 법적권리 보장

- 원양어선원 유급휴가 확대(20일→25일)를 통한 선원의 이사회성 점진 개선 및 업종별 노동환경 차별 축소
-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적지식이 없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선원 192명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제공
- 직무상 장애등급을 받은 선원을 대상으로 ①재활직업훈련(4명), ②재활스포츠지원, ③후유증상관리(1명) 등을 지원
- 선원 임금채권 보장 강화를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20%) 설정 및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('21.2)

### ④ 선내 인권침해 예방

- 선내 인권침해 예방 정책 구상, 현장의 실제여건 청취, 각 기관 간 시책 공유를 위한 선내 인권침해 네트워크 운영(3회)
- 선내 인권보호를 위한 선주의 여권대리보관 금지조항 도입 및 선원 수장제도 폐지에 따른 선장의 시신 인도 의무 부과('21.6)

### ⑤ 선원의 정신건강 증진

- 가족·사회와 단절되어 장기간 승선하는 2,032명의 선원에게 직무 특성에 맞는 선원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
- 선원전자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2,041명의 선원에게 전자독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및 자기계발 기회 부여

### ⑥ 선원 복지 체감도 제고

- 선원 대상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및 선원정책 인지도 점검을 위한 선원·선사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, '21.10~11)
- 순직선원 장제비 53명, 선원가족 휴양시설 1,586명, 선원가족 장학 170명 지원

- 2,807명의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임금체불, 재해보상, 퇴직, 기타 고충상담 실시 및 외국인선원을 위한 한국어회화 책자 4,500부 제작
- 선원복지회관 건립 선원들의 입항 후 휴식 공간의 제공을 위해 서남해권(목포항, '20~'21), 동해권(죽변항, '21)에 선원복지회관 건립 진행 중
  - \* 현황(총26개소) : 목포항 선원복지회관(20억원, '20~'21) 완공 시 총 27개소
- 해양원격의료 지원사업으로 선박 120척에 의료장비 설치 및 2,672명의 선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

## 7 선원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

- 부상 선원의 최소생활수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보상액을 선원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설정('21.6)

### ◆ 보완 필요사항

- 선원근로감독관 충원 계획 미이행으로 지방청 근로감독업무 인력부족 지속
- 규제심사 장기화·추가용역으로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지연
- 근로기준법과 선원법령 상 갭(선내 괴롭힘 방지 조항 부재 등) 지속

## 3. 해기인력 역량 강화

### 1 해사영어 등 글로벌 역량 강화

- IMO 표준 해사영어교재 개발·보급(e-book, 동영상강좌), 원격학습 기반 마련으로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

### 2 국적 해기사 해외진출 확대

-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해기사의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해외취업 지원(8.9.~10.29., 10명)
- 우리나라 해기사의 해외취업 확대 및 진출국가 다변화를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한·그리스 해기협약 체결(12.10)
  - \* 영국, 일본, 카타르, 독일 등 41개국과 협정체결

### ③ APEC SEN을 통한 선원고용복지 확대

- APEC 선원 네트워크의 유치·운영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선원정책을 선도하고, 우리 선원의 해외취업 확대 도모
- 실습선이 없는 개도국(신남방국 해양대 학생 20명) 대상으로 국내 실습선을 활용하여 실습 시행 및 선진교육 체계 홍보(11.17~12.17)
- 선내 구성원 간 소통 강화, 갈등 해소를 주제로 선원을 위한 정신 건강 책자 발간('21.3월), SNS 등을 통해 온라인 배포

### ④ 실습형 해기양성 교육

- 이론교육 위주의 연수원 선원교육을 실습, 토론식 교수기법을 도입 및 시뮬레이터 활용 확대 등 참여형, 실습형 과정으로 개편
- 해사고, 오션폴리텍 등 승선실습 교육 시 운항실습 비중을 확대

### ⑤ 해기교육 인프라 확충

- 서남해권 선원 안전교육 수요를 해소하고, 교육시설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해 연수원 목포 분원\* 개설·운영('21~, 목포분원 교육인원 8,308명)  
\* (위치) 목포 북항 배후부지 / (총사업비) 133억원 / (사업기간) 16년~20년
- 연수원·해사고 졸업생의 해기역량 제고 및 해기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연수원 상선 실습선 추가 신조·운영('21.8~)
- 건조분야 위주의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운영('21~)



### Ⅲ. 최근 선원 상황 진단

#### 1

#### 공급 측면

- (해기사) 해양대, 해사고, 오션폴리텍, 수산분야 지정교육기관 등을 통해 평균 매년 약 2,0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지속 양성

\* ('17) 2,045명 → ('18) 1,931명 → ('19) 1,964명 → ('20) 1,964명 → ('21) 1,934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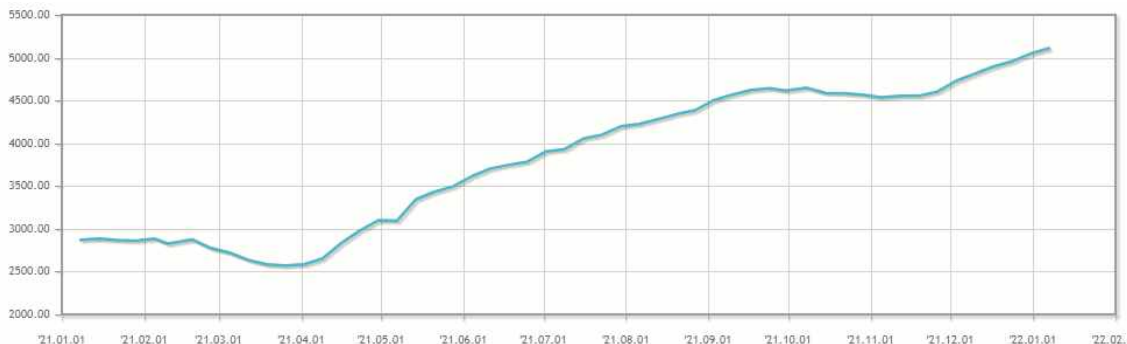
- (외국인) 지속적 해기사 양성에도 불구하고 선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국적 해기사 취업 비중 감소

\* 국적 외항선 외국인 해기사비중 : ('14) 19.0% → ('17) 26.2% → ('20) 29.7%

\*\* 외국인해기사와 국적해기사 간 평균 약 3,000만원의 임금차액이 존재

- (수요) '20년 이후 선복량 대비 물동량 증가로 해운경기 상승사이클 진입에 따른 현장 해기사 부족 현상 지속

《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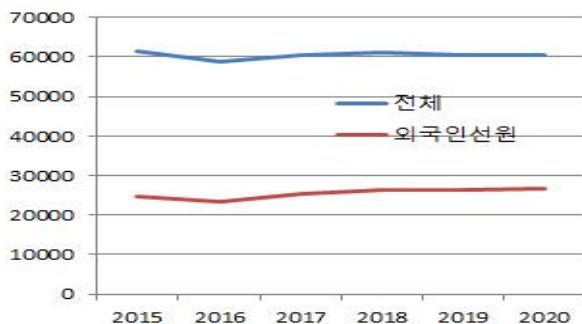


※ 자료 : SCFI

- (부원)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, 육상과의 임금 격차 감소 등으로 하위직급, 낮은 임금의 부원 자리부터 외국인선원이 증가하는 추세

\* 한국인부원은 부원직 중에서도 주로 갑판장, 조기장 등 부원 중 상위직급으로만 승무

《 외국인선원 변화 추세 》



(단위 : 명)

	15년	17년	19년	20년
전체 선원	61,600	60,397	60,454	60,340
한국인 선원	36,976 (60.0%)	35,096 (58.1%)	34,123 (56.4%)	33,565 (55.6%)
외국인 선원	24,624 (40.0%)	25,301 (41.9%)	26,331 (43.6%)	26,775 (44.4%)

※ 자료 : 선원통계연보

- (신규 인력) 해기사의 경우 승선근무예비역\* 제도 등을 통해 승무경력 5년 미만이 전체 해기사의 약 20% 가량을 지속적으로 유지

\* 매년 신규로 1,000명을 배정하고 있으며 현재 2,880명 복무 중('21.12월 기준)

- 다만 부원의 경우 승무경력 5년 미만이 전체 부원의 약 8%\*에 불과

\* 업종별 현황 : (외항상선) 18.1% (내항상선) 24.1% (원양어선) 3.4% (연근해어선) 4.6%

#### 《 취업선원의 승무경력 현황(20년말 기준) 》

(단위 : 명)

승무경력	합계	5년 미만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 15년 미만	15년 이상
전체 선원	33,565	5,131	4,987	6,194	17,253
- 해기사	21,020	4,033	3,366	3,260	10,361
- 부원	12,545	1,098	1,621	2,934	6,892

※ 자료 : 선원통계연보

- (숙련 인력) 승무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해기인력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로 장기승선 유도 필요

#### 《 최근 6년간 취업선원의 승무경력 》

(단위 : %)

승무경력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5년 미만	16.1	16.8	17.2	16.6	15.8	15.3
5년~10년 미만	13.9	12.8	14.6	14.3	15.1	14.9
10년 이상	70.0	70.3	68.2	69.1	69.1	69.8
합계	100	100	100	100	100	100

※ 자료 : 선원통계연보

- (고령 인력) 60세 이상 선원이 전체 선원 약 40%이며, 선원 인력 고령화에 따른 선원들의 세대교체 시기 대비 필요

- 부원의 경우 60세 이상이 전체 선원의 약 40%로 고령화가 더 심각

#### 《 취업선원의 연령별 현황(20년말 기준) 》

(단위 : 명)

연령	합계	25세 미만	25세 ~ 29세	30세 ~ 39세	40세 ~ 49세	50세 ~ 59세	60세 이상
전체 선원	33,565	1,029	2,408	3,206	4,553	9,019	13,350
- 해기사	21,020	950	2,244	2,330	2,540	4,756	8,200
- 부원	12,545	79	164	876	2,013	4,263	5,150

※ 자료 : 선원통계연보

□ (임금 수준)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 대비 전체 선원의 월평균 임금 및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

○ 다만 선원 개인이 느끼는 노동환경·근로복지 대비 보상이 낮은 수준으로 신규선원 유입 감소 추세 및 높은 이탈률 지속

\* (육상최저임금) ('16년) 월 126만원 → ('19년) 월 174만원 → ('22년) 월 191만원  
(선원최저임금) ('16년) 월 164만원 → ('19년) 월 215만원 → ('22년) 월 236만원

\*\* (전체 근로자(정규직) 월평균임금) ('14) 2,700천원 ('17) 2,896천원 ('20) 3,180천원  
(내항상선 부원 월평균임금) ('14) 2,827천원 ('17) 3,017천원 ('20) 3,265천원  
(연근해어선 부원 월평균임금) ('14) 3,007천원 ('17) 3,242천원 ('20) 3,676천원

□ (휴가 등 근로 조건) 선원법 상 승선기간이 상선은 8개월, 어선은 최대승선기간 규정이 없어 교대주기가 긴 문제

○ 직책별 최저승무인원 이상 승무하지 않으면 출항할 수 없어 교대를 위한 충분한 예비인력 부족 시 실질적 휴가 보장에 한계

○ 가정 등 개인의 삶과 일과의 균형이 중시하게 되면서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·사회와의 단절도 승선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

\* 선원직을 그만두는 사유 중 "가족·사회와의 단절"(73.1%)이 가장 많음('16년)

□ (선내 여건) 선내 구성원 연령범위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\*하고, 외국인선원도 점차 증가\*\*함에 따라 세대간·이(異)문화간 갈등 발생

\* (연령별 현황) (20대) 10.2% (30대) 9.6% (40대) 13.6% (50대) 26.9% (60세이상) 39.8%

\*\* (외국인선원 비율 변화) ('08년) 24.7% → ('12년) 35.4% → ('16년) 39.5% → ('20년) 44.3%

□ (외국인 선원) 우리나라 어선, 내항상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국회,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

\* 국적선원과의 임금 차별, 휴식시간 미보장, 열악한 근무 환경 등 지적

- (선원법령) 현 선원법령은 선원 대상 노동 및 안전·보건법규,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법규, 교육훈련 법규 등의 성격이 혼재
  - \* (선원법) 선장의직무와권한(2장), 선내질서의유지(3장), 선원근로계약(4장), 임금(5장), 근로시간및승무정원(6장), 유급휴가(7장), 선내급식과안전및보건(8장), 소년선원과여성선원(9장), 재해보상(10장), 복지와직업안정및교육훈련(11장), 취업규칙(12장), 감독등(13장), 해사노동적합증서와해사노동적합선언서(14장),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(15장)
  - \*\* (선박직원법) 해기사의자격과면허등(2장), 선박직원(3장)
- (포괄성) 육상근로자 적용법령과 달리 법령이 다양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어 법률수용성 부족 및 현장 민원소지 유발
  - \* (고용노동부)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으로 구분
- (개정지체) 근로기준법령의 지속적 개정으로 육상근로자의 근로환경 수준 대비 선원노동자의 노동환경·복지 등 지체현상 발생
- (근로감독) 총 54명의 선원근로감독관(일반공무원)이 6만여명 선원에 대한 근로 및 안전·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 중으로 만성적 인원부족
  - 또한 교육과정의 질적·양적 부족(1년 2회 워크숍)으로 전문성 제고에 한계, 이에 따른 현장민원 증가의 악순환 발생
    - \* (고용노동부) 소양교육 24주(교과목 71개), 직무교육 2주, 적응훈련 12주
- (공인업무) 선원명부 공인 시 선박에 따라 최대 18종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어 선주 행정부담 증가 및 행정력 낭비
  - 근로감독 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선원법령 상 의무사항(보험가입증서, 취업규칙신고서 등)을 모두 공인과정에서 확인한다는 건의 지속
    - \* 선원명부/선원수첩, 해기사면허증, 교육이수증, 건강진단서 등 최대 18종

## IV. 2022 선원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

목 표	<b>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</b> <b>- 미래를 이끄는 해기인력 양성,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조성 -</b>		
주 요 지 표	<input type="checkbox"/> 외항선 국적해기사 비중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적부원 신규 양성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여건 개선, 복지 확대 등을 통한 선원 만족도 제고		
추 진 방 안	①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	선원 양성	① 수요맞춤형 해기사 양성 ② 국적부원 양성 추진 ③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
		행정 역량 강화	④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⑤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 ⑥ 선원 행정시스템 개선 ⑦ 선원 민원업무 디지털 전환
	②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	제도 개선	① 선원근로감독 역량 강화 ② 선원 노동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 ③ 선원 관련 국제협약 대응
		권리 보장	④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⑤ 선원의 법적권리 확대 ⑥ 선내 인권침해 예방 ⑦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
		복지 강화	⑧ 외국인선원 주거기준 마련 ⑨ 선내 안전·보건 강화 ⑩ 선원의 정신건강 증진 ⑪ 선원 복지 체감도 제고 ⑫ 선원직업 인식 개선
	③ 해기인력 역량강화	글로벌 역량	① 해사영어 등 글로벌 역량 강화 ② 국적해기사 해외취업 진출 지원 ③ APEC SEN을 통한 국제협력
		해기 역량	④ 실습형 해기양성 교육 ⑤ 해기교육 인프라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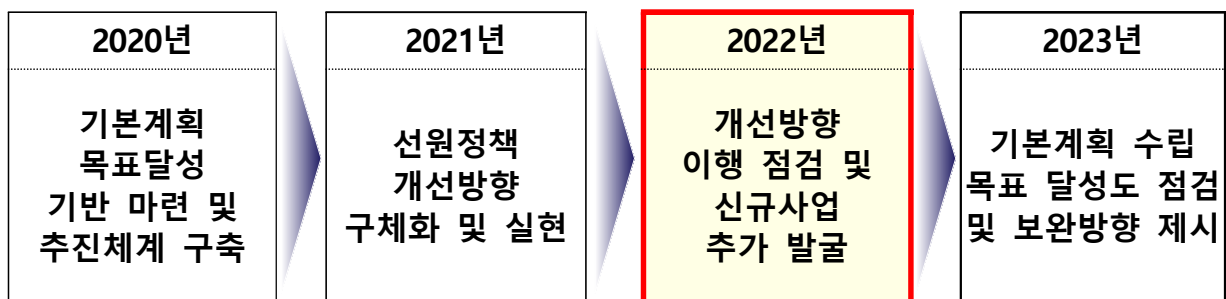
## □ 선원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

- (수립배경) 선원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「선원정책 기본계획(‘19~’23)」 수립(‘19.1.17)
  - \* 당초 기본계획(5개년)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, 법 개정(‘19.7.4)에 따라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부여(선원법 제107조)
- (수립목적) 해기인력 양성 및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선원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 도모
  - 선원수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국인선원을 일정규모로 유지하고,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확대를 통한 선원직 매력 제고 추진
- (주요과제) ① 안정적 선원수급 체계 구축, ②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, ③ 해기인력 역량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

## □ 시행계획 수립방향

- (수립방향)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마다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, 매년 이행결과를 토대로 조정 추진
  - ‘22년도는 그간 시행된 정책을 점검·평가하여 사업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에 중점

### <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 추진방향(안) >



\* 연차별 추진방향은 매년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수정가능

### ① 안정적 선원수급 체계 구축

- 외항선 승선 국적해기사 확대를 위한 국적해기사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
- 해외 감염요인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전 방역조치는 유지하되, 항만 방역지침 완화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원교대 지원 추진
- 선박관리사의 외국적 선박 관리수탁 확대 등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'22년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('21년 1개사에 이어 1개사 추가)

### ②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

-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선원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선원(E-10) 숙소기준 마련
- 선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확보를 위해 「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」 및 「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」 제정
- c-188 비준을 위한 선제적 법령개정작업(휴식시간 도입, 승하선 공인 확대 등) 추진
- 외국인 선원 송입송출 공공성 강화 및 한-인니 MOU 후속조치 시행
-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상 근거 마련

### ③ 해기인력 역량강화

- 노후 실습선(한우리호, 선령 31년 10개월) 대체건조를 위한 신조선 건조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
- 국적 해기사의 해사영어 능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좌 제작 등 교육 기반 마련

## IV. 추진과제

### 1.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

#### 1-1

#### 수요맞춤형 해기사 양성

##### □ 추진배경

- 일부 선사는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해기인력의 부족을, 동시에 일부 선원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필요
  - 시장 수요에 맞게 인력이 탄력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기사 양성 경로를 다변화하여 안정적 해기사 수급 기반 마련 필요

##### □ 추진방안

- (차세대 해기사 교육과정 운영) 다가오는 2D(Decarbonization, Digitalization) 시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
  - (친환경선박 해기사 양성) IMO 환경규제('20~)로 인한 친환경 가스연료추진선박\* 확대 도입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
    - \* IMO의 「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(IGF Code)」 채택으로, 해당선박 승무를 위해 「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초교육, 직무교육」 이수 필요
  - (新 해양산업 인력 양성) e-Navigation, 자율운항선박시스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신 해양산업 인재 양성('21~)
  - \* e-Navigation 운용자 교육, 시스템관리자 교육, 자율운항선박의 면허제도, 교육과정 등 개발
- (지정교육기관 확대) 해군, 해운조합 등 지정교육기관을 확대하여 해기사 양성경로 다변화 및 해기인력 확보 추진



- (오션폴리텍 운영) 승선경험은 없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교육을 실시하고, 해기사 면허취득 지원
  - 사전에 업종별, 면허급수별 선사의 구인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개설함으로써, 교육수료 후 현장취업으로 연계
  - \* ('22년) 외항상선 3급 140명, 내항상선 5급 20명, 어선 5급 40명, 어선 6급 20명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실시예정
- (선원일자리 창출지원) 외국인해기사를 국적해기사로 대체고용한 선사에게 평균임금차액(약 30백만원)의 일부 지급
  - \* (안) 노사정 각 5억원 출연(15억원) → 평균임금차액의 50%(15백만원) 100명분 지급
  - 지원금 지급심의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내 노-사-정 심의 위원회 구성('22.3) 및 지급대상 선사결정, 보조금 지급(~'22.10)
- (산업계 맞춤형 일자리창출) 산업계가 요구하는 선종별 특화 교육 실시 및 미취업 청년 해기사의 취업 지원
  - 선종별(탱커, LNG 등)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, 취업박람회를 통해 미취업자가 해당 선박(선사)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\*
  - \* ('22년 예산) 400백만원 / (양성인원/취업연계) 연간 200명 교육 및 취업연계 추진
  - 승선경험 및 관련 지식을 既보유하고 있는 해군전역자 대상으로 선원 전직에 필요한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

## □ 추진배경

- 국적선원의 승전기피, 외국인 선원 증가로 국적 선원의 비율이 감소하고 선원 인력이 고령화되어, 국적 부원선원의 확보 및 세대교체 대비 필요
  - 해양수산업의 안정적 경영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적 부원 선원을 일정 규모로 확보·유지 필요

\* 부원선원 노령화(50세이상) : ('14) 54.7% → ('17) 75.3% → ('19) 75.0%

\*\*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: ('14) 20,894명 → ('17) 22,798명 → ('19) 26,331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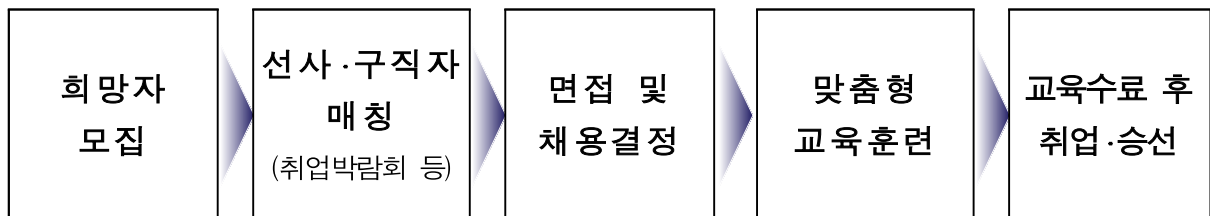
- 또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일정규모의 국가필수선대\* 운영에 따라 내국인 부원 양성 필요

\* 외국인선원 승선이 부원 6인 이내로 제한됨(「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」 제6조)

## □ 추진방안

- ('22년도 사업) 신규 국적부원 양성 등을 통해 90여명 취업 지원
  - \* ('22년 예산) 305백만원/ (시행주체)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/ (목표인원) 연간 92명
- (국적부원 양성) 외국인선원 증가 및 부원 선원직업의 기피로 감소하는 국적 부원선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
  - LNG선, 탱커선, 화물선 등 선종별 법정 필수교육을 지원하고, 교육 수료 이후 해당 선박(선사)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

< 국적부원 양성프로젝트 추진체계 >



- 업종·선종별 신규 국적부원의 선사 채용수요 조사를 통해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법정 필수교육 이수 및 취업 연계 지원

\* 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) 사업계획 수립·시행 / (해양수산연수원) 법정 필수교육 시행 / (참여선사) 취업 연계 지원

## □ 추진배경

- 해외 선사 선박 관리에 필요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필요

## □ 추진방향 및 내용

-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하여 선박관리 서비스 품질 보증, 대외적 신뢰도 제고 및 정책적 지원 지속
  - 인증제도 효과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사업자 1개사 추가 선정(해양수산연수원 인증센터, 한국선급, 선박관리협회 협업)

\* ('22년 예산) 사업비 100백만원 / (시행주체) 한국해양수산연수원/ (인증기업) 1개 기업

## □ 추진방안

- (인증기업 지원)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선주국가 로드쇼 지원, 선박관리전문가 교육 무상지원 및 인증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 선사에 대한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
  - 국제정책 동향, 해외시장 동향 등 수요자 정보를 파악하고, 주요 선주국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홍보를 위한 로드쇼\* 지원
- \* 인증업체 로드쇼 지원 예산은 지자체·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
- 인증업체 직원에 대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·심화 교육비 지원
- 선주국가의 수요확대 유도 및 인증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업체 서비스 이용 해외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('22하)
- \* (항만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) 항만의 관라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가능
- (인증제도 홍보) 선박관리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·지원 세부방안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설명회 개최('22.상)

\* 선박관리사업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추진

## □ 추진배경

-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감염요인 유입 차단 및 외국인선원 국내 유입 억제를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로 선원교대 지원에 어려움 지속
  - 특히, 장기승선에 따른 선원인권 보호 및 선원교대 제약이 발생됨에 따라 적정한 선원구성이 어려워 선박운영에 차질 증가

## □ 추진방안

- (추진방향) 해외 감염요인은 차단하면서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항만방역 지침 완화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원교대 지원 추진
  - \* 선원교대 차질 발생 시 선박운영에 직접적인 문제 발생, 특히 해상운송 의존도 (99.7%)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활한 선원교대는 수출입물류체계 안정화에 필수적
- (방역관리) 외국항만에서 임시상륙 금지, 외부접촉 최소화 및 승선자 관리, 방역확인 등 국적선에 대한 철저한 선내 방역지침\* 준수
  - \* 마스크 의무착용, 식사 관리, 소독 및 건강관리, 하역작업 시 행동요령 등
- (선원교대 지원) 방역당국 협의를 통해 국내 항만 간 이동시에는 상륙 하선 허용 및 격리면제 확대 등 방역지침 완화 추진
  - \* ①14일간 선박에만 체류, ②선원교대 및 승하선 이력 없음, ③유증상자 없음을 전제로 14일 이상 운항선박 및 비대면 작업이 가능한 국적선종(5종) 격리면제 대상
  - \*\* 한-일 여객선, 예부선, 일반화물선, 운반선 등 격리면제 대상에 미포함
- (외국인력 공급) 입국 전 접종 및 PCR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시설 격리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외국인선원 교대 지원
  - \* 국내 선원 고용현황(20년 기준) : 총 57,810명 중 외국인선원 26,775명으로 46.3% 차지
- (선원 백신 접종) 예방접종자 중심의 방역정책에 따라, 해운협회·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접종절차 안내 등 백신 접종률 제고 추진

## □ 추진배경

- 외국인선원이 전체 선원의 약 40%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

\* (외국인선원 비율 변화) ('08년) 24.7% → ('12년) 35.4% → ('16년) 39.5% → ('20년) 44.4%

\*\* (E-10-2 무단이탈율) ('18) 8.8% → ('19) 7.1% → ('20) 7.1% → ('21) 13.9%

- 특히 외국인 선원 도입 업무를 민간에서 전담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

## □ 추진방안

- (지침 정비) 「외국인선원 관리지침」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노사정 T/F 협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\* 삽입 개정 추진

\* 선원의 근무처 변경 사항 및 승하선 공인 등 이탈방지 대책

- (고용규정) 우리부의 지침과 법무부의 체류비자 규정의 상호 업무를 검토, 효율적인 실무를 위하여 주요 조항\* 개정

\* 고용신고(제5조), 고용추천(제5조의2), 업무의 위탁(제5조의3)

- (처벌규정)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제재(혼승비율 위반 시 시정 지시, 주의 촉구 등)를 법률로 상향 추진

- (MOU 이행) 한-인니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송출비 기준 마련 등 MOU 후속조치를 위한 양국의 협업 추진

- (송출비용 투명화) 송출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협 내규에 송입업체의 추가 송출비용의 징수 금지 명문화

- (선원교육강화) 인권침해 구제 및 고충해결 안내 등 외국인 선원 필수 교육 과정을 강화 등 교육 운영 개선\*

\* 표준교재(송출국 언어 등)개발 및 평가 체계 마련 등 교육체계 강화

## □ 추진배경

- 승하선 공인신청 시 과도한 서류부담(선종에 따라 최대 18종)으로 인해 민원인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부담 심화

## □ 추진방안

- (공인간소화) 기관 간(KOMSA 보유 검사증서 등)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일부 서류 요구제외를 통한 민원인 제출 서류 간소화
  - (정보공유) 교육이수증, 선박검사증서, 보험·기금 가입증서 등 발급기관과의 정보연계로 서류제출 부담 완화 추진
  - (간소화) 공인제도(경력인정)의 본 취지와 거리가 먼 서류(어업 허가증, 고전압설비확인증서 등)는 제출하지 않도록 지침 검토
- (인력충원)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청 공인담당자(9명) 신규 충원 추진
  - (업무량) 「선원법」 제44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청의 연근해어선원 부원 약9천명에 대한 공인업무 5.2만건(50%) 증가 예상
  - \* 지방청 담당자(18명)의 '21년도 승하선 공인 처리건수는 약 10만건으로 선원 1명 당 5.8건을 처리하여 9천명 증가 시 5.2만건 업무량 추가 예상

< 연근해어선 승선원 현황('18~'20) >

(단위: 명)

구분	2018년도			2019년도			2020년도		
	계	해기사	부원	계	해기사	부원	계	해기사	부원
계	13,982	4,602	9,380	13,666	4,547	9,119	13,743	4,647	9,096

\* 자료출처: 2020 한국선원통계연보

- (추진체계)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업무량이 많은 지방청순\*으로 공인담당자를 추가 배치하여 공인업무 처리

\* 총9명: 부산2, 제주1, 인천1, 여수1, 마산1, 동해1, 목포1, 포항1

## □ 배 경

- 선원 민원업무 개선\*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(과기부 산하) 주관 사업비 지원 공모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(15억원 확보 / 선원정책과)
- 해기사 면허증서 전산화, 교육·자격 증명 통합 전자 선원수첩, 비대면 승하선 공인 및 관련 기관간\*\* 정보연계 추진 등

\* 종이 증명서에 기반한 업무처리로 민원처리 대기시간 발생, 서류관리 불편, 출장비 지출 등 민원만족도 저하(해수부 민원사무 중 91% 이상 / 연간 18만 여건)

\*\* 해수부, 한국해양수산연수원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해경청, 수협 등

## □ 주요 사업내용

- (해기면허 디지털화) 종이 면허증서를 디지털 증서 전환을 통해 민원처리 간소화, 위변조 방지 등(면허 총 15만여건 / 연 3만 4천여건 신규 발급)
- (전자 선원수첩) 선원 신분사항, 교육·자격 이력, 신체검사, 고용관계 등 수기 사항을 디지털화하여 전자 선원수첩으로 발급(수첩 10만여건)
- (비대면 승하선 공인) 선박검사증서 등 승하선 공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, 신속한 비대면 민원업무 처리(연간 6만 9천여건)
- ☞ (부대 효과) 매년 선원수첩·자격증 발급비용 7억원 절감, 업무처리 시간 6만 시간 단축, 민원인 출장비 18억원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발생

## □ 향후 계획

- (협약식) 정보 활용기관 업무 협약식 개최('22년 2월 중)
  - \* (해양수산 분야 전산 활용기관) 해수부, 한국해양수산연수원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해경청, 수협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인터넷진흥원 등
- (사업관리) 전산사업자 선정('22. 1, 인터넷진흥원), 사업수행('22. 2~12/ 10개월)

## 2. 선원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대

### 2-1

### 선원 근로감독 역량 강화

#### □ 추진배경

- 선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선원근로감독관\*과 본부 담당부서도 인원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감독 및 선원권리 보호에 어려움 존재

\* (현황) 총 54명으로 대부분 일반 업무 겸직

- 경사노위 합의사항\* 이행 및 선원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전문성 확보 필요

\* 선원법 적용 어선 단계적 확대, 어선원 근로기준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추진 합의(21.12)

#### □ 추진방안

- (근로감독관 충원) 일선 근로감독관 충원(13명\*) 추진 및 전문직 (관) 지정 검토\*

- 임금체불, 부당해고 등 국적선원의 권익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경사노위 합의 및 외국인 어선원 인권 개선방안 이행 필요

\* 각 지방해양수산청별 1명 + 부산청 추가2명(원양어선 담당) 충원 계획

\*\* KMI, 선원의 인권 및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선원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

- (권역별 선원노동위원회) 권역별 선원노동위원회 상설사무국 신설(30명\*)을 통해 전문가를 통한 노정문제 해결 추진

\* (부산 9명) 사무국장 1, 조사관 8 / (인천.목포.동해 각 7명) 사무국장 1, 조사관 6

- (근로감독관 지원강화) 일선 근로감독 역량 증진을 위한 상·하반기 정기교육 실시, 법령질의 및 민원상담 사례 공유방(바다넷) 개설 추진

\* 현 근로사례집은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의

- 또한,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 민원 대응을 위해 노무 전문과 자문 신규 예산사업 확보 추진('22년 예산 반영 목표)



## □ 추진배경

-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(경사노위 산하) 합의문('21.11.5) 이행의 일환으로 “노동환경 개선” 을 위한 노사단체 협의체 구성·운영

## □ 주요내용

- 「선원법」 적용범위(20톤 이상 어선)의 단계적 확대에 관한 사항
- 어선원의 휴식시간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 - 원양어선원의 휴식시간 규정 도입(1일 10시간, 7일 77시간) 및 연근해어선 부원 선원명부 공인제도 도입 등 추진('22)
- 선원근로감독관 증원에 관한 사항
- 기타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사항
  - 근로기준법령과 선원법령의 겹 분석·공유 및 선원법령 개정 등

## □ 추진방안

- 노·사를 대표하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인사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사노위 합의('21.11)사항 단계적 추진

\* 선원정책과,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, 선원노련, 수협중앙회

### <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합의문 주요 내용>

- 노사정은 어선원 근로기준 개선을 위해 ①어선원 법정 근로기준 개선 논의 및 개정, ②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증원 추진
- 노사정은 20톤 미만 어선원의 근로기준 개선에 대한 「선원법」 적용방안 논의를 비롯한 관련법령의 적용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노사정협의회를 구성 논의

## 1. 어선원 노동협약(C.188) 비준 추진

### □ 추진 배경

- 국제노동기구(ILO)에서 어선원 근로복지 기준에 대한 노동협약(C.188)이 채택('07.6.14.)·발효('17.11.16.)됨에 따라 비준 검토 필요

\* (비 준) 프랑스, 아르헨티나, 노르웨이, 세네갈, 태국, 영국 등 14개국

\*\* (미비준) 한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, 인도 등 어업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미비준

### □ 주요내용

#### [원양]

- (승선기간) 법령 또는 '기타조치'에 의해 어선원이 송환자격을 갖추기 위한 승무기간(최대승선기간)을 정하도록 함

- (휴식시간) 1일 10시간, 7일 77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되, 보상적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탄력근로 가능

\* 「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」에 따라 1일 10시간, 1주 77시간 적용 하되, 1개월 단위 탄력적용 및 1일 최소 6시간 휴식 보장 중

⇒ 휴식시간 규정을 도입하되, 구체적인 최소휴식시간 및 단위탄력 기간은 노·사 합의에 의하도록 선원법 개정 추진('22년 상반기)

\* 휴식시간 규정 도입 이후 휴식·작업·항해시간 등으로 산정하는 승무정원 규정 도입 추진

#### [연근해]

- (선원명부) 선원명부를 작성 후 선내비치 및 당국보고

⇒ 그간 공인면제 되었던 연근해어선 부원 선원명부 공인 합의(9.13), 선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('22년 상반기)

- (휴식시간) 1일 10시간, 7일 77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되, 보상적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탄력근로 가능

⇒ 원양어선원 휴식시간 규정 도입 이후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며,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설득 과정 필요

- (안전·보건) 선내 근로 위험예방, 어구·조업지식 관련 교육훈련, 선내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(어선원 참여)

⇒ 선원근로자관리제도개선TF에서 「어선안전조업법」 개정 작업 중

\* 협약에 따라 안전·보건 위험성 평가는 점진적 이행(비준 이후 법령 개정) 가능

## □ 추진계획

- (휴식시간) 원양어선원 휴식시간 규정 도입 : '22년 상반기
- (승하선공인) 공인도입 선원법령 개정 및 절차 간소화\* 추진 : '22년 중
  - \* 「선원 민원업무 디지털 전환」 사업('22.2~12)을 통한 공인업무 비대면화 추진 중
- (승선기간) 승선기간 단축위한 추가 노사정 협의회 추진 : '22년

## 2. ILO 특별삼자간위원회(STC) 대응

### □ 주요내용

- 해사노동협약(MLC) 비준에 따라 비준국 이행상황 점검 및 협약 개정논의를 위한 특별삼자간위원회\* 정기 개최
  - \* 매년 1~2회 개최되며, 노·사·정의 해사노동협약 이행력 제고방안 및 개정 검토
  - 지난 4-1차 위원회('21.4)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MLC 이행상의 문제점,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실태 등을 논의·공유

### □ 추진계획

- 4-2회차 특별삼자간위원회 참가(제네바, '22.5)
  - \* STC 의제 전달 시 전문가 및 노사정 의제 검토를 거쳐 STC 참석
- 향후 특별삼자간위원회(STC) 의제개발 및 타 회원국 제출의제 검토·대응을 위한 연구비 등 예산 확보 추진

### 3. 어선원 교육훈련 등 협약(STCW-F)

#### □ 추진배경

- 어선원의 **훈련, 자격증명** 및 당직근무의 국제기준으로, 국제해사기구(IMO)에서 **채택**(‘95.7.7) 및 **발효**(12.9.29)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응 필요
  - \* (**비 준**) 러시아, 아이슬란드, 노르웨이, 키리바시, 시에라리온, 스페인 등 31개국
  - \*\* (**미비준**) 한국, 중국, 일본, 미국, 대만, 인니, 베트남, 미얀마, 필리핀 등

#### □ 주요내용

- (**적용대상**) 영향이 **예상**되는 어선\*은 24m 이상 선박(국내총톤수 189톤)
  - \* 당직항해사, 선장 등으로 승선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새로이 요구
- (**주요내용**) 어선에 대한 **당직기준 적용**에 따라 **당직자격 및 승무경력 필요\***, 모든 어선원 **기초안전교육 이수\*\*** 등
  - \* (현행) 어선은 당직기준이 없어,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선원의 최저승무기준만 적용 (STCW-F 비준 시) 당직항해사 및 어선선장에 대해 최소한의 승무경력(2년) 필요
- (**예상되는 영향**) 당직근무 수행을 위해 **선원 추가고용 부담 발생**, **승무경력(2년) 필요\***에 따른 **초급해기사 구인 인력난 가중**
  - \*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(3개월 승선), 오션폴리텍 수료(1+1개월 승선) 시 승무 경력을 1년만 인정하고 있어, 추가 승선경력이 있어야 승선 가능
- 어선원 **기초안전교육\*** 대상 확대에 대비 **인프라 확충 등 고려 필요**
  - \* 현재 선원법이 적용되는 20톤 이상 어선원만 기초안전교육 수료

#### □ 추진방안

- 업단체 지속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STCW-F 협약 개정 논의에 **적극 대응**
  - \* (일정) HTW전문위원회(‘20~’22) → 해사안전위원회(MSC, ’22.12) 채택검토

## □ 추진배경

-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「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(20.6)」에 따라 개선 추진

## □ 추진방안

- (원양어선원 근로조건 개선)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(20.12)이 정착되도록 이행상황 노사정 합동점검 계속 추진
- (근해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) 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, 고용허가제 수준의 숙소기준 마련 추진
  - (최저임금 개선)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26년까지 단계적 인상추진
    - \* (23년) 85% → (24년) 90% → (25년) 95% → (26년) 100%
  - (주거기준 마련) 고용허가제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외국인 선원 주거기준을 마련하고,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반영 추진
    - \* 수협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, 주거기준 마련 이후 위반 시 외국인 선원 배정 제한 검토
- (설문조사 개선) 설문내용 및 조사결과를 구체·계량화하기 위해 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실태조사 설문지 내용 및 항목 개선
  - \* 설문내용이 추상적이고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항목을 추가·개선하고, 조사결과 계량화, 최신 조사기법 반영 등 추진
- (외국인선원 고충상담) 외국인선원의 실질적 고충 해결을 위해 고충상담 콜센터 상담 시 관할 지방청에 신고접수 연계
  - \* 현재, 선원복지고용센터(☎1566-3151) 및 수협 콜센터(☎1566-3151) 권한이 없어 고충 해결보다는 고충 해결 절차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
  - 외국인선원과 송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원 근로감독을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 실시

## □ 추진배경

- 원양항해선 특성상 장기승선하는 경우가 많고, 충분한 예비원 부족 시 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도 어려운 경우가 빈번
- 그 외 선원법과 현실의 괴리 또는 선원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원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

## □ 추진방안

- (법령개선 협의체 구성) 고용노동부 법령(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)과 선원법령 간 겹 축소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체 구성 및 법령 개정추이, 사업정보 등 공유

- (근로환경 개선) 근로기준법 상 압류방지 통장(계좌) 개설의무, 태아검진시간 부여, 괴롭힘 방지규정 등을 반영하여 선원법 개정
  -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령\*을 참고하여 도입하되, 한정된 인력·고립된 환경 등 선상근무의 특수성을 반영

\* (근로기준법 제6장의2)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(제76조의2)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(제76조의3)를 규정('19.1.15. 개정)

- (체당금 청구절차 개선) 선주의 파산, 도산 시 신속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청구절차\* 개선

\* (현행)근로감독관 도산확인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→ (개선)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 원 발급이 있는 경우 "보험업자·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"에게 체불임금(체당금) 청구 가능토록 선원법시행령(제 18 조의 4) 개정

- (예비원제도 점검) 선주의 예비원 확보(선원법 제67조)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실태 확인 및 제도 운용 개선여부 검토
- (교대기간 단축) 선원법에 따른 8개월의 최대승선기간(현 단체협약 6개월)의 점진적 단축을 유도하여 선원의 이사회성 개선

## □ 추진배경

- 선내 약자\*에 대한 선내 인권침해가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내 문화 구축 등 사전 예방 노력 필요

\* 실습선원, 외국인선원, 승선근무예비역 등

-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‘현장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 뿐 아니라 선사, 노조, 교육기관 등의 참여가 필수적

## □ 추진방안

- (승선근무예비역 보호) 인권침해 가해자 형사처벌 확정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패널티 강화

- 형사처벌 확정 가해자의 면허 취소 및 해기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불량 해기사를 업계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「선박직원법」 개정 추진

- (통신시설 설치) 통신시설(자유로운 신고가 가능하여야 함)을 미설치하고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배정제외

\* 2023년 인원 배정 시부터 적용

- 배정제한 선사에 대한 정부의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 제한\* 추진

\*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기준 마련

- (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내실화) 선주단체 및 선원단체, 선원 교육기관(대학, 고교, 해양수산연수원), 선원복지고용센터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내 인권침해 예방 관련 사항 주기적 모니터링\*

\* 선내 문화 개선방안 마련('19)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사례 공유.전파 등

- 선주단체 및 노조와 협조하여 강사양성 과정 및 교육컨텐츠 개발 (인권 교육자료, 팸플릿, 브로셔, 등) 추진

- (권리의식 확보) 노동권 인권교육 도입 선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

## □ 추진배경

- 전사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권리 확보를 위해 실습시간 제한, 휴식시간 보장 등 선박소유자 중심으로 실습생 안전관리 체계 마련·시행 중(20.8월 시행)

\* (근무시간)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, 당직시 1주간 16시간  
(휴식시간) 실습시간 외 모두 휴식시간(8시간 연속), 1주간 1일이상 휴일을 부여  
(안전관리 체계)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, 표준협약서 작성 등

⇒ 학교의 실습생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부여 등 법적기반 마련을 통해 더 확고한 실습생 안전관리 추진(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)

## □ 추진방안

- (학교의 실습생 관리) 학교는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 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실습생을 선발하고 관리

\* 실습생 건강진단서, 체력검정, 인적성 검사결과 등 선사 제공 등 포함

- (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등) 학교는 실습전 학교실습선박에서 실습생 안전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, 설명회 등 개최

\* (사전교육) 실습전 2주간 선박적응훈련 실시, 실습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 
(설명회) 학생, 교원 등 대상 실습 운영계획 설명하고 공지

- (실태점검 실시) 학교 담당자가 실습생 승선선박에 대하여 방선 하여 실습생 인권,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

\* 매월 최소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해 승선점검 실시, 매 학기 종료 1개월 이내 해수부에 결과 제출

- (사고 예방) 실습생 사고유형통계 마련 등을 통해 다발성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, 책임교수 지정 실습생 지도·관리

\*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실습생의 고립감, 우울증,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



## □ 추진배경

- 20톤 이상에 승선하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어선원(E-10)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다수 지적

\*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'외국인 어선원 인권 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'(20.6)의 후속조치

-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숙소기준을 시행 중\*이나, E-10 외국인 선원은 숙소기준이 없어, 숙소의 질 차이가 크고, 열악한 경우도 존재\*\*

\*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법 등을 통해 고용부 숙소기준 마련('19.7)

\*\* 선주가 다양한 생활시설(주택, 숙박시설, 원룸, 상가주택 등)에서 기본적 생활 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나, 일부 가설 건축물 및 선박 거주도 확인('21.7~8)

## □ 추진방안

- (추진방향)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 근로자법을 준용하여, 외국인선원제(E-10)도 선원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숙소기준 마련

- (숙소기준) 조업 후 선적지에 입항 시 선박 및 가건물에서 숙소를 제공하지 않도록 육상 숙소를 제공토록 세부절차 마련

\* (고용허가제) 고용허가 시 숙소사 시설 확인절차 강화 및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·컨테이너 숙소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('21.1 시행)

↳ 미이행 사업주는 고용허가 취소,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추진

### <외국인선원 숙소기준(안)>

1. 조업후 선적지에 입항시 선박에서 숙식하지 않도록 육상 숙소 제공
2.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을 제공하는 선주는 1년간 유예기간을 통해 화장실, 목욕시설, 냉난방, 환기시설을 갖춘 육상 숙소 제공
3. 근로기준법 시행령(제55조~제58조의2) 준용

- (유예기간 부여)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을 제공하는 선주는 일정기간을 통해 적절한 냉·난방 설비 등을 제공토록 유도

## 1. 선내 의약품 등 비치기준 제정

### □ 추진배경

- 그간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 공문 ‘특수장소(선박)에서 취급용 응급의약품 목록표(’09)’에 따라 선내 의약품을 비치
  - \*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(보건복지부 고시) 제5조제4호에 따라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목록에 따라 의약품을 비치
-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개정(’21.2.19 시행)에 따라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율하는 고시 제정 필요

### □ 주요내용

- (대상 의약품) 해수부가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(’09)한 ‘특수장소(선박)에서 취급용 응급의약품 목록표’ 적용
  - ILO의 「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」에 따라 일부 마약류 및 전문 의약품 등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, 법령\*에 따라 마약류는 불가하며, 전문의약품 추가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연내 개정 어렵다는 복지부 회신
  - \*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발급 불가, 마약류관리법 상 취급자가 아니면 관리 불가
- (성분표기) 당초 의약품 목록을 상품명에서 성분명으로 표기하여 대체 약품으로 지급가능 하도록 함(상품명은 예시로 표기)
  - \* 한국약사협회 자문결과 성분명만 있어도 약국 방문 시 필요 의약품을 모두 조달가능

### □ 향후계획

- 정기 근로감독 및 일시점검을 통해 선내 의약품 비치 여부 확인

## 2.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정

### □ 추진배경

- 해사노동협약(Maritime Labour Convention, 2006) 비준과정에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의 일반의무가 **선원법에 반영**(‘15.1.9 시행)
- 이를 근거로, 선원들의 선내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인 「선내 안전보건기준」 수립이 필요

\*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사전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며, 올해 상반기 중 고시 예정

### □ 주요내용

안전관리체제	안전보건관리자(선사 내 육상직), 안전담당자(기관장 등), 보건담당자(의료관리자 등), <b>안전대표자</b> (선원 중 호선으로 선출), 선내 안전위원회(4명이상) 등 안전관리체제 및 역할* 규정(제7조~제21조) * 안전관리체제 구축은 해사노동협약(MLC) 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역할 부여
직무사고보고	직무상 사고 시 각 지방청에 신고의무,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안전저해요인 검사 등 조치(제22조~제25조)
일반원칙	선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, 위험성을 평가하는 ‘위험성 평가’ 의무화, 선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(제26조~제30조)
세부안전기준	작업 시 보호장비, 승하선 안전, 안전표지판, 조명, 작업 사전 승인 제도 도입, 자체 안전기준 마련 등(제31조~제44조)
위생기준	선내 위생관리, 환기, 조리작업, 식료품·식수관리, 감염병 예방, 응급 조치, 정신건강, 마약 및 알콜 남용 방지 등(제45조~제59조)
진동및소음등	작업 중 진동 감소를 위한 조치, 소음 기준, 소음 예방 조치, 개인 보호 장비 및 작업장비 요건 등(제60조~제81조)
교육훈련	모든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자체교육 실시, 안전보건관리자, 안전대표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(40시간) 등(제82~제85조)

### □ 추진계획

- 국조실 규제심사·의견조회 및 고시 제정 완료 추진(‘22. 上)
-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시행 대비 선사·선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검토

## □ 추진배경

- 육지와 분리되어 폐쇄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가족·사회와 단절된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건전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
  - 특히 원격상담, 힐링프로그램, 전자도서관 등 평상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선원복지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이 중대

## □ 주요 사업내용

- (선원마음건강센터 운영) 해상 근무환경에서 받는 우울증, 불면증 등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\*의 체계적인 검진·상담서비스 제공 및 음주, 흡연 중독예방 등의 힐링 프로그램 운영

\* 전문가(정신건강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 사회복지사)가 대면·비대면 전문 상담 실시

- (상담서비스) 원격지 및 항해 중에도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원격 검진·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, 전문가의 전문 정신건강 상담 추진
- (예방교육) 직무 스트레스 관리, 세대·문화 소통 등 다양한 정신건강 주제에 대해 선사, 해양수산연수원과 협업하여 정신건강 교육 실시
- (전문가 치료 지원) 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과적 증세에 대해 전문가 치료를 지원\*하여 조기 일상복귀 지원 및 중증질환 예방

\* 지원내역 : 정신과 초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(1인당)

- (선원전자도서관 운영) 온라인 전자도서관 운영하여 승선 중인 선원들이 독서를 통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

\* 독서감상문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서비스 이용 유도

- (가족·사회와 단절 해소) 원양어선 선원에게 가족들이 조업현장으로 찾아가 가족·사회와 단절을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지원\*

\* 원양어선 조업현장 방문 선원가족에게 항공료 지원(50명, 1억원) 등

## □ 추진배경

- 선원직 기피 등에 따른 선원 고령화 및 인력수급난 심화 추세에 대응하여 선원복지 증진을 통한 선원들의 삶의 질 제고 필요

## □ 추진방안

- (체감형 선원복지) 선원들의 교통편의, 자녀 장학금, 휴양시설 등 선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안정적 지원\*

\* 휴양콘도 이용(1,600명, 1.6억원),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(235명, 4억원)

- (해양원격의료) 원양선박 선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원양선원의 건강한 승선을 위한 해양원격의료 사업 지속 확대

\* ('21) 120척(신규 20척) → ('22) 140척(신규 20척) → 최종 260척 지원을 1차 목표로 설정

\*\* 누계 총 120척(원양상선 103척, 원양어선 15척, 기타 2척(아라온호, 이사부호)) 지원완료

- (선원복지회관) 선원들의 입항 후 휴식 공간의 제공을 위해 서남해권(목포항, '20~'21), 동해권(죽변항\*, '21)에 선원복지회관 건립 추진

\* 현황(총26개소) : 목포항 선원복지회관(20억원, '20~'21) 완공 시 총 27개소

- (선원 무료법률구조)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적지식이 없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선원에게 무료로 각종 법률상담 제공

- (장해선원 재활지원) 승선 중 장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치료를 돕고, 재활스포츠훈련, 후유증상관리 등을 제공하여 일상복귀 지원

\* 훈련비용(600만원이내), 훈련수당(월50만원), 직업준비금(30만원) 등 지원

- (복지포인트 도입) 승선경력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수강 또는 여행·문화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제도 도입 추진

- (선원건강진단 고도화) 선원 직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 항목 추가(고립감을 고려한 정신건강진단 등)를 통해 예방 및 빠른 치료 유도

\* 원양구역 항행 선원들은 일반건강진단 항목에 빈혈, 소변, 매독검사가 포함된 특수진단 수검

## □ 추진배경

- 선원직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개선을 통한 해운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사 운영, 기념관 건립 등 활동 필요
- '21년 한국해사주간 중 세션 운영을 통해 한국선원주간 등 선원직 인식개선 활동의 필요성 제기

## □ 주요 사업내용

- (한국선원주간 운영) 선원직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개선을 위해 세계선원의 날(6.25)을 포함한 주간에 다양한 행사 개최
  - \* 상선은 IMO 세계선원의날(6.25)를, 어선은 수산인의날(4.1)을 기념하지만 각각 6.25 사변일, 만우절과 겹치므로 6.25 포함주간을 한국선원주간으로 선포·운영
- (선원의 날) 선원법 개정을 통해 6월2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
- (세션운영) 선원직의 노동환경·복지 개선 방향, 선원직 매력화 방안, 직업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세션 운영
- (캠페인) 선원직 홍보를 위한 수필, 유튜브, 웹툰 등 공모·시상과 함께 매년 진행하는 선원의 날 기념표창 수여식 동시 시행
- (선원기념관 건립) 소외된 선원의 노고와 헌신을 새롭게 조명해 선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 추진
  - \* 6개 선원관련 단체에서 선원기념관 건립 공동추진위 출범('21.4.5)
- (입지) (구)부산국제여객터미널 건물(부산항 기념관으로 개조) 1개층 사용
- (구성) 순직선원 흉상, 장기근속 유공 선원 발자국, 우리나라 선원의 역사, 선상생활 다큐멘터리 상영 등 전시·조형물
  - \* 6개 선원관련 단체와 선원기념관 전시 콘텐츠 기획, 전시품 기증 협조 등

### 3. 해기인력 역량강화

#### 3-1

#### 해사영어 등 글로벌 역량 강화

##### □ 추진배경

-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\*의 공용언어인 해사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효율 제고

\* 국내선박 6,838척에 국적선원 32,949명, 외국선원 26,331명(외국인 비율 44%, '19년 기준)

- 아울러, 국적 해기사의 우수한 해기역량에 해사영어 능력의 강화\*를 통해 해외취업에 활동에 지원

\* 해사영어 교재개발('20)→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및 강의 콘텐츠 제작('21~'22)→ 영어 구술평가 제도 도입 방안 검토('24~) → 영어구술시험 시행('25)

##### □ 추진방안

- (일반 해사영어 온라인 강좌 개발) 해사영어 교재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강좌 콘텐츠 제작('21년 40단원 완료, '22년 80단원)

- (전문 해사영어 온라인 강좌 개발) 항해 전문 해사영어(80단원) 및 기관 전문 해사영어(80단원) 교재에 대한 온라인 강좌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('23~'24년 120단원)

- 선박현장 동영상, 사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교재를 구성하고 말하기 연습, 영작 평가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

- (영어 구술평가 도입 방안 검토) 선원들의 해기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기사 면허시험의 영어 구술평가지도 도입 방안 마련 검토('24~, 연수원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)

- 선박직원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발굴, 구술평가 항목 선정, 평가대상 면허급수, 평가 난이도 등에 대한 종합검토

## □ 추진배경

- 근무조건이 좋은 유럽 등 해외선사에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국적 선원에 비해 실제 국적해기사의 해외취업은 정체된 상태

\* 유럽지역 해기사 취업실적: ('16)86명, ('17)109명, ('18)83명

- 해외의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해기사들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공,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취업 연계 지원 필요

## □ 추진방안

- (글로벌 역량강화)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('20년 19명→ '21년 40명)\*하여 유럽 등 해외취업 지원

\* '19년 시범사업(예산 노사분담) : 13명 교육 후 9명 취업

'20년 사업(예산 노사분담) : 18명 교육 후 16명 취업

'21년 사업(예산 노사분담) : 10명 교육 후 취업 추진('21.12월 기준 6명 취업)

- (교육지원) 국내\*(해양수산연수원, 1개월) 및 해외 실습교육\*\*를 지원하여 청년 해기사들의 맞춤형 해기 역량강화 도모

\* 해사영어, 선상 리더십 교육, 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등 실시

\*\* 핀란드 '아보아마레' 혹은 '노르웨이교육훈련센터'에서 맞춤형 직무교육(2개월)

- (승선실습 및 취업) 핀란드 등 유럽 선사의 승선수습\*(3개월)을 실시하고, 수습 완료 후 선사면접 등을 통해 취업연계

\* 핀란드의 '아보아마레'와 MOU를 체결하여 유럽 선사로 승선수습 지원

- (마케팅) 국내 청년해기사 사업대상 선발을 위해 사업홍보를 강화하고, 실제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선사 대상으로 마케팅 확대

- (해기협정 체결 확대) 국내 해기사의 해외취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취업 수요가 많은 국가와 해기협정 체결\* 확대

\* 호주, 피지, 브루나이, 우크라이나, 아랍에미리트 등과 협의 진행 중(既체결 41개국)



## □ 추진배경

- 국제해사기구(IMO) 이사국 및 사무총장 연임 등 계기 국제 해사 분야 기여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위상 제고 필요
- 대한민국 우수 인적·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신남방국 해양대학교 학생 승선실습을 통해 국제해사 교육·훈련 미래시장 선점 필요

## □ 추진방안

- (교육대상) 신남방국, 개발도상국 해양대학교 학생
  - 자체 실습선이 없는 개발도상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기교육 장비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홍보 등을 통해 국제 선원이슈 주도
    - \* '21년 시범사업 : 40백만원, 1개월, 10명(필리핀 5명, 인도네시아 2명, 베트남 3명)
    - \*\* '22년 사업계획 : 1,100백만원, 3개월, 30명으로 확대(총 인원의 25%를 여성으로 구성)
- (교육프로그램)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승선 필수 교육(기초안전교육), 승선실습\*, 문화체험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 구성
  - \* 항해) 선교 장비 친숙화, 출항 전 점검, 출항 및 항해당직 ECDIS 이론 및 실습 등  
기관) 기관실 친숙화, 기관실 시스템의 이해, 기관실 파이프라인의 이해 등
  - 기초에서 면허취득 직전 단계까지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여 원활한 면허취득 지원을 통한 양질의 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 제공
- (협력체계 구축) 프로그램을 이수한 우수 외국 해기인력의 국내 송입을 통한 국내 해운시장 내 질높은 외국인 선원 비율 제고
  - 선박관리산업협회, 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상선실습 연계\* 추진
    - \* 프로그램 수료 후 선사 실습 및 취업연계(시범추진)

## □ 추진배경

-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대부분이 이론형 교육\*으로 운영되어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미흡

\* 안전 및 직무교육(57개)중 31개 과정과 자격취득 교육(63개) 대부분

- 실질적으로 해기역량을 키울 수 있는 승선실습도 교육실습조별 교육인원 과다\*, 구체적 운영규정 미비 등으로 실습효과 저하

\* 교관 1인당 학생수 : 연수원(15~16), OECD(13), IMO모델코스(12), 해양대(10~12)

## □ 추진방안

- (연수원 교육과정 개편) 현장 실무 맞춤형 해기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연수원 교육 중 단계적으로 체험형(토론, 실습 등) 교육 확대

- 실습 확대를 위해 교육정원 조정, 교재 개발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, 추가 장비도입\*을 통해 실습중심 교육 확대('21~)

\* 선종별(컨테이너선, 탱커선 등) 하역작업이 가능한 교육장비 설치·운영(2종)

\*\* 기관장비 분해·조립 및 전자엔진 실습기자재 확보를 통한 체험형 실습 확대

- (승선실습 확대) 해사고, 오션폴리텍 등 승선실습 교육 시 운항실습 비중을 확대

- 실습조당 인원을 축소(15명 → 12명)하고 평가방법 개선(실습평가 강화) 등 개인별 학업성취도 및 실습효과 증대

- (승선실습 체계개편) 학생들의 승선실습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 등으로 대체하기 위한 해외사례 연구

- (해기 교육체계 개편) 친환경선박,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해양산업 분야 교육과정 반영 등 해기 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

## □ 추진배경

- 우수한 해기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現운항환경에 맞는 시뮬레이터 등 최신 교육 인프라를 이용한 현장 중심형 실습교육이 필수
  - \*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과정 당 교육인원 감소로 안전교육 시설 포화 상태
- 또한, 우수 해기인력 양성 및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후 상선 실습선 신조 추진

## □ 추진방안

- (실습 교육장비 확충) 최신 선박운항 환경\*에 맞는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 실습 교육장비\*\* 운영 등('22~)
  - \* 탄소중립, 그린뉴딜 등 국내외 정책으로 친환경 선박 확산 추세(민간,관공선)
  - \*\* 친환경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중연료 전자제어 추진기관 시뮬레이터 도입 추진
- (노후 실습선 신조 추진) 실습선 한우리호의 선령이 31년 10개월로 구조 및 시설 등의 낙후로 실습생의 안전한 승선 교육을 위한 신조 추진
  - \* (사업규모) 상선실습선 LNG 연료 전기 하이브리드 10,000톤급 1척(승선인원 239명), (총사업비) 1,223억원
  - \*\*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제출 등 사업추진 예정

## V. 추진일정

추진전략 및 추진과제	추진일정		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<b>1 안정적 선원수급체계 구축</b>				
① 수요맞춤형 해기사 양성				
② 국적부원 양성 추진				
③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추진				
④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				
⑤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				
⑥ 선원 행정시스템 개선				
⑦ 선원 민원업무 디지털 전환				
<b>2 선원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</b>				
① 선원근로감독 역량 강화				
② 선원 노동환경 개선협의체 운영				
③ 선원 관련 국제협약 대응				
④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				
⑤ 선원의 법적권리 확대				
⑥ 선내 인권침해 예방				
⑦ 실습선원의 권리보호				
⑧ 외국인선원 주거기준 마련				
⑨ 선내 안전·보건 강화				
⑩ 선원의 정신건강 증진				
⑪ 선원 복지 체감도 제고				
⑫ 선원직업 인식 개선				
<b>3 해기인력 역량강화</b>				
① 해사영어 등 글로벌 역량 강화				
② 국적 해기사 해외진출 확대				
③ APCE SEN을 통한 선원 고용·복지 확대				
④ 실습형 해기양성 교육				
⑤ 해기 교육 인프라 확충				